

[단독]IOC에 냈던 서울-평양올림픽 제안서에 대북제재 위반 사업들 포함

배현진 의원 “평화 올림픽을 빙자한 혈세 상납 프로젝트” 개최外 비용 28조에 北고속도 구축 등 적시 서울시 4월 제출...IOC, 호주로 선정



서울시가 4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제출한 2032년 서울-평양 여름올림픽 제안서에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있는 사회간접시설(SOC) 사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IOC는 7월 2032년 여름올림픽 개최지로 호주 브리즈번을 최종 확정했다.

30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IOC에 제출한 올림픽 제안서에서 올림픽 개최 비용을 5조 7276억 원으로 추산했다. 서울이 3조 7813억 원, 평양이 1조 9463억 원의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올림픽 이외 비용' 명목으로 약 28조 8000억 원이 서울~평양 간 교통 및 통신망 등 SOC 인프라 투자에 투입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이 제안서의 토대가 된 서울시의 올림픽 유치 기본계획서에는 ‘올림픽 이외 비용’ 예상 내역으로 서울~평양 고속도로 및 고속철도, 송전선로, 5세대(5G) 이동통신망 구축 등이 적시됐다. 홀로그램 기술을 통해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서울 잠실과 비무장지대(DMZ), 평양 능라도 등 3곳 경기장에서 동시 개·폐회식을 열겠다는 구상도 담았다.

정부 산하 기관인 통일연구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 위반 여부에 대한 배 의원의 질의에 “(북한에) 금속류, 기계류 등 반입이 금지돼 있어 해당 사안들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물자, 장비 반입이 불가하다”고 답했다.

남북은 2018년 9월 정상회담 당시 2032년 남북 공동 올림픽 유치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부터 서울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통일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왔다. 배 의원은 “평화 올림픽을 빙자한 수십조 원의 혈세 상납 프로젝트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